

6년 전 우장춘로 참사 잊었나…지자체·경찰, 책임 네 탓만

국제신문 박정민 이승훈 김진룡 기자 | 입력 : 2020-07-26 22:04:10 | 본지 3면

초량동 지하차도 인재 참사

- 10여분 만에 2.5m 저수지화
- 증설한 배수펌프도 용량 부족
- 2시간 18분간 차량통제 안돼
- 동구, 사고 후 재난문자 발송

부산형 맞춤형 대책 절실

- "동천 등 저지대 하천 범람 반복
- 물순환 근본 체계부터 바꿔야"
- 시, 부산 특별재난지역 건의
- 특별교부세 130억 지원 요청

지난 10일 침수 피해로 도심 기능이 마비됐던 부산이 지난 23일 또다시 물난리가 나면서 부산시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특히 시와 지자체는 예보된 만조시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침수가 우려되는 전체 시내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구 초량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면서 바다와 인접한 부산의 도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재난대책을 시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지난 24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날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1지하차도를 찾아 사고 경위를 묻고 있다. 김종진 기자 kij1761@kookje.co.kr

■시와 지자체, 경찰 ‘따로국밥’

시는 초량1지하차도를 호우경보 발효 때 자동차 진입이 통제되는 ‘3등급’ 지역으로 분류했다. 당일 오후 2시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지하차도 사고가 난 동구에선 140mm(시간당 최고

80mm)의 비가 쏟아졌다. 이날 밤 10시18분 길이 165m, 폭 19m, 높이 3.5m의 초량1지하차도에는 10여분 만에 2.5m까지 물이 차올라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과 운전자를 덮치면서 3명이 숨졌다.

정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3등급인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 특히 만조시간은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터라 시가 동구에 선제적 대응을 지시하고 이를 점검했어야 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관할 동구는 이곳의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위험도가 3등급 이하라면서 이곳 대신 범람한 수정천과 동천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했다. 여기에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자체에 도로 통제권이 있다고 하는 반면 지자체는 경찰과 협의 없이는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맞선다. 결국 시와 구,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발동됐다면 지하차도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폭우에 취약한 지하차도의 용량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장춘로 지하차도 참사 이후 부산시는 부산 35개 지하차도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했다. 초량1지하차도 배수펌프도 2010년 증량돼 분당 20 t의 물을 배출하지만, 만조 시간 때 급격히 불어난 물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시와 16개 구·군이 도로와 지하차도의 배수 구조를 바꾸고, 호우경보 때 위험도가 높은 도로·지하차도를 즉각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2주일 만에 범람한 동천

동천은 또 넘쳤다. 지난 10일 내린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채 복구되기 전에 동천이 범람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1차 범람 당시 119토목구조대는 시의 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가물막이가 설치돼 있어 바다로 흐르는 통수 단면이 좁아졌고 만조까지 겹쳐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물막이는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 인근 동천에서 ‘ㄷ’자 형태로 설치돼 있었는데 하천 폭 50m 정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시는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5만 t의 바닷물을 유지용수로 쓸 수 있게 설계된 기존 관로와 펌프장을 25만 t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해왔다.



지난 23일 내린 폭우로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사에 물이 들어찬 모습. 연합뉴스

시는 이를 철거했지만 동천의 범람 원인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수영강 하류인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일부도 물에 잠기면서 부산지역 저지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는 “지역 하천의 물순환 체계를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면서 “물순환이란 관점에서 볼 때 동천 유역의 저류 기능을 확대하거나 물흐름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천재지변 타령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라는 입장을 반복한다. 김종경 시 시민안전실장은 “동천지역 피해는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며 “동천과 초량1지하차도 주변이 침수 대비 사업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평소 폭우 상태로는 침수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송양호 물정책국장도 “만조 시간대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다 보니 도심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았다.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지대인 네덜란드 벤치마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폭우’였다면서 이번 피해를 애써 축소하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물난리 직후 ‘물폭탄에도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식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130억 원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침수를 당한 뒤 23일 또 다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다는 지침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초량 1·2, 부산진시장 지하차도에 전광판, 비상방송 안내 시설, 자

동차단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정민 이승륜 김진룡 기자